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31
----------	------

발의연월일 : 2020. 11. 12.

발 의 자 : 강훈식 · 송갑석 · 이용빈
이광재 · 김경협 · 이규민
신동근 · 정춘숙 · 송재호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목적으로 피해자 보호 외에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음.

또한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원자력사고 한건마다 3억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환산 시 약 5000억원)로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사고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 외에도 배상조치액의 적정성에 대해 물가수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안전하고 건전한”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본문 중 “3억”을 “6억”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상조치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u>건전한</u>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안전</u> <u>하고 건전한</u> ----- -----.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u>3억</u>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자력손해가 원자력사업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배상책임 한도) ① ---- ----- ----- <u>6억</u> ----- -----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배상조치액) ① (생략)	제6조(배상조치액)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배상</u>

<p><u>② (생략)</u></p> <p><u>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신설></u></p>	<p><u>조치액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배상조치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p> <p><u><삭제></u></p> <p><u>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하더라도 제5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p>
---	---